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 국내·외 여성통신

- 해외
- 국내



## 영국<sup>1)</sup> 야당들, 총선 앞두고 2030 유권자 표심 잡기 위한 양성평등정책 발표

영국 주요 정당들은 2019년 12월 12일 총선을 앞두고 최근 화두인 '남녀 임금 격차 줄이기', '여성 육아휴직 유급 기간 연장' 등 양성평등을 강조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Labour)과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s)은 이러한 공약을 통해 양성평등 가치와 일·가정양립을 중시하는 20~30대 유권자 표심을 잡으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2019년 11월 13일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동당은 2030년까지 성별 임금 격차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자유민주당은 대기업이 남녀 임금 격차는 물론 BMME(영국에서 흑인, 아시안, 소수 인종을 일컫는 단어로 사용됨)와 성적 소수자(LGBT)의 임금 내용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하며 노동당에 맞섰다. 자유민주당은 '핑크 세금(pink tax)'을 없애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했다. 또 노동당은 여성 직장인의 육아휴직시 임금지급기간 9개월을 총1년으로 공약했다. 기업에서 폐경을 겪는 여성 직장인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훈련하도록 하는 여성 친화적인 공약도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 집권당인 보수당은 야당의 공약을 두고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리즈 트러스 여성평등장관은 2030년까지 성별 임금 격차를 없애겠다는 노동당의 공약에 대해 "노동당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고 있다. 현재 남녀 임금 격차는 1997년에 27.5%이었지만 2019년 기준으로 17.3%일 만큼 그 격차가 이미 기록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 해외 여성통신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 제공하는 국제동향 중 '해외통신원' 주요 기사를 정리한 것임.

1) 작성 : 황수영 브리스톨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 참고문헌 •

BBC(2019.11.13) "General election 2019: Labour pledges to close gender pay gap by 2030", <https://www.bbc.com/news/business-50412958> (검색일: 2019.11.25.)  
Independent(2019.3.5) "Pink tax on women's products targeted by Liberal Democrat MP", <https://www.independent.co.uk/news/uk/politics/pink-tax-price-gap-women-razors-deodorant-gender-a8808736.html> (검색일: 2019.11.25.)

## 수사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피해자 2차 피해문제 우려

영국에서 성폭행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피해자 휴대전화에 있는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디언지 보도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자 절반 이상이 검찰로부터 휴대전화에 있는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받았으며,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사건수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과거 성생활과 생활습관' 등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하는 증거로 수사기관이 역이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CEW 대변인 케이티 러셀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사건 조사를 이유로 피해자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수집하지만 대부분 정보가 수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점점 증가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측 대변인은 "피해자 모두 반드시 휴대전화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보제공을 요청한다"고 해명했다.

• 참고문헌 •

England & Wales (2019.9.21.) "Exclusive Rape Crisis data on rape victims' mobile phone downloads", <https://rapecrisis.org.uk/news/latest-news/exclusive-rape-crisis-data-on-rape-victims-mobile-phone-downloads/>(검색일: 2019.9.25.)  
The Guardian (2019.9.21) "People who report rape face 'routine' demands for their mobile data",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9/sep/21/people-report-rape-routine-demands-mobile-data?CMP=Share\\_iOSApp\\_Other](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9/sep/21/people-report-rape-routine-demands-mobile-data?CMP=Share_iOSApp_Other)(검색일: 2019.9.25)

## 관련법 개정으로 성범죄자 등 중범죄자의 교도소 복역 기간 증가

영국 법무부는 10월 1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강력 폭행 범죄자 및 성범죄자들은 앞으로 교도소 수감 기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중상해죄 (grievous bodily harm, GBH) 나 살인, 강간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중범죄자에 한해서다. 영국은 2005년부터 표준 확정형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관련법을 바꿔서 성범죄자를 비롯한 중범죄자가 형기의 2/3 이상을 교도소에서 보내도록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성범죄자가 주요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19년 3월 말 기준으로 영국과 웨일스 전체 교도소 재소자의 18%(1만3359명)가 성범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년 초부터 음주감시전자발찌 시범사업이 영국 전역에 도입된다. 발찌 형식의 이 전자 장치는 실시간으로 뱃에 있는 알코올 양을 측정해 음주를 통제한다. 전자발찌 착용은 가해자들이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가정 폭력, 강간 등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는 추가 교정시설 마련에 25억 파운드(우리 돈 약 3조7천800억원)의 예산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3년간 경찰 2만 명을 추가로 뽑아 보호 감찰 기간 동안 감시도 더 강화할 예정이다.

### • 참고문헌 •

- GOV.UK (2019.10.01.), “Violent and sexual offenders to spend longer behind bars”, <https://www.gov.uk/government/news/violent-and-sexual-offenders-to-spend-longer-behind-bars> (검색일: 2019.10.15.)
- Ministry of Justice(2019.04.15.), “Offender Management Statistics Bulletin, England and Wales”,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05271/offender-management-statistics-quarterly-q4-2018.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05271/offender-management-statistics-quarterly-q4-2018.pdf) (검색일: 2019.10.15.)
- BBC (2019.09.12.), “HMP Full Sutton: First ‘mega prison’ plans approved”, <https://www.bbc.com/news/uk-england-humber-49681744> (검색일: 2019.10.15.)

## 성별이 임금격차에 영향 크고 50대 직장 여성에서 가장 심각

영국에서는 50대 직장인의 성별임금격차가 28%p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지난 10월 26일, 50세 이상 구직자를 위한 직업정보 제공업체인 Rest Less가 2018년 4월 기준 영국 통계청의 근로 시간과 연간소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0대 여성의 평균연봉은 3만2천52파운드(한화 약 4천 8백만 원), 50대

남성은 4만4천 561파운드(약 6천 7백만 원)로 여성이 28.1%p 적었다. 20대의 성별임금 격차 16.4%p 보다 훨씬 격차가 크다. 영국에서 50대 직장인의 성별임금격차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BBC의 여성 언론인 때문이다. BBC를 대표하는 언론인 사미르 아메드는 10월 21일, 남성 동료들과 똑같이 일하면서도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이 부당하다며 BBC를 노동법원에 고발해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아메드씨는 BBC 뉴스 프로그램 ‘뉴스워치(Newswatch)’ 회당 출연료로 400파운드를 받지만, 다른 남성 언론인은 비슷한 프로그램인 ‘포인트 오브 뷰(Points of View)’ 회당 출연료로 3천 파운드를 받는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BBC 측은 “두 프로그램 출연료를 똑같이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Rest Less 설립자인 스튜어트 루이스는 “50대 직장 여성들은 성차별뿐 아니라 나이로 인한 차별까지 당하고 있어 직장에서 이중고에 시달린다”고 분석했다. 성별임금격차철폐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 Gemma Rosenblatt of the Fawcett Society는 10월 28일 가디언 인터뷰에서 “정부는 성별임금격차를 줄이지 않는 기업에 법적 제재를 가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참고문헌 •

- Rest Less(2019.10.26.), “Gender Pay Gap at its Widest for Those in Their 50s: Average Salary of a Woman in Her 50s is 28% Lower Than a Man’s”, [https://restless.co.uk/news\\_and\\_insights/gender-pay-gap-at-its-widest-for-those-in-their-50s/](https://restless.co.uk/news_and_insights/gender-pay-gap-at-its-widest-for-those-in-their-50s/) (검색일 : 2019.11.14.).
- The Guardian(2019.10.28.), “Gender pay gap at its widest for women in their 50s, study reveals”,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oct/28/gender-pay-gap-at-its-widest-for-women-in-their-50s-study-reveals?CMP=Share\\_iOSApp\\_Other](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oct/28/gender-pay-gap-at-its-widest-for-women-in-their-50s-study-reveals?CMP=Share_iOSApp_Other) (검색일: 2019.11.14.).
- BBC(2019.10.30.), “Samira Ahmed gives evidence in BBC tribunal”, <https://www.bbc.com/news/entertainment-arts-50235875> (검색일: 2019.11.14.)

## 프랑스<sup>2)</sup>,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 살해 증가에 대한 대응계획 발표

프랑스에서는 최근 남성 배우자나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femicide) 이슈가 큰 화제가 되고 있다. 9월 1일 남부지방의 기차역 근처 쓰레기터미에서 21세 여성의 토막 시신 일부가 발견되었다. 이웃 일부는 여성이 길거리에서 그녀의 파트너에게 살해당했다고 증언

2) 작성 : 광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했지만, 그녀의 파트너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식집계에 따르면 살해된 여성이 올해 프랑스 내 100번째 여성살해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 주최 하에 프랑스 도심에서 시위가 개최되었으며, 시민들은 1부터 100이 쓰인 숫자 팻말을 들고 100명의 피해자를 기리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프랑스 정부는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 의해 살해당하는 여성피해자 문제가 불거지자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정책 및 제도적 개선방향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에두아르 필리프(Edouard Philippe) 총리는 사건접수 및 처리절차를 보다 간소화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격리하고, 피해여성 보호에 실효성을 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여성살해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다 즉각적인 예산투입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 BBC (2019.9.3.) "France announces anti-femicide measures as 100th killing recorded",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9571327> (검색일: 2019.9.23.).
- BBC (2019.9.7.) "Femicide: The murders giving Europe a wake-up call",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9586759> (검색일: 2019.9.23.).
- France 24 (2019.9.9.) "Daddy killed mummy: Women take to Paris streets with anti-femicide poster campaign", <https://www.france24.com/en/20190909-france-femicide-daddy-killed-mummy-women-paris-streets-poster-campaign> (검색일: 2019.9.23.).

## 성적취향 및 가족 구성 무관하게 모든 여성에 체외수정 허용하는 생명윤리법 초안 하원 통과

지난 9월 말, 프랑스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생명윤리법" 초안이 찬성 359표, 반대 114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이제 상원에서 통과한다면 공식적으로 채택 및 발효된다. 이번 법안은 43세 이하 모든 여성의 체외수정과 같은 임신과 관련된 의학적 시술을 허용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공공의료제도에서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리모 출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 법안은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이 추진해 온 주요 사회개혁안들 중 하나로, 새 생명윤리법에서는 모든 여성이 개인의 성적 성향이나 가족 구조에 상관없이 생식권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EU) 28개국 중 18개국에서 동성커플 또는 싱글인 여성이 임신을 위한 의학적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프랑스에서 동성커플 또는 싱글여성은 대부분 해외로 가서 시술을 받아야

했다. 이번 법안은 여전히 큰 논란으로 남아있다. 여론조사기관 Ifop에서 지난 9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약 1천여 명의 18세 이상 프랑스 시민 응답자들 중 동성커플 여성의 체외수정 시술에 65%, 싱글여성의 시술에 65%이 찬성한다고 한다. 반면 종교단체, 보수단체들과 같은 반대 입장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 10월 파리에서의 수만 명의 반대 시위 참가자들은 “내 아버지는 어디에”, “모든 사람은 아버지가 필요하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파리 도심을 행진했다. 프랑스 상원 의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 • 참고문헌 •

- AP News(2019.10.15.), “France OKs bill legalizing IVF for lesbians, single women”, <https://apnews.com/5fdc102ac2094c1ca5bd15d6672be6f5>(검색일:2019.11.21)
- France 24(2019.09.27.), “French lawmakers approve IVF for lesbians, single women”, <https://www.france24.com/en/20190927-france-national-assembly-lawmakers-approve-ivf-lesbians-single-women> (검색일 : 2019. 11. 21.).
- IFOP(2019.9.13.), “Les Français, la PMA et la GPA – IFOP”, <https://www.ifop.com/publication/les-francais-la-pma-et-la-gpa/> (검색일: 2019. 11. 21.).

### 독일<sup>3)</sup>, 청소년 대상 성형수술 광고 금지하는 법안 제출

독일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형수술 광고를 금지하는 논의가 시작됐다. 옌스 슈판 연방 보건부장관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독점적으로 또는 두드러지게’ 보이는 성형수술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에게 보낼 메시지는 ‘당신은 지금 있는 그대로 충분히 괜찮다’이지만 “성형수술 광고는 아름다움이나 외모에 매우 민감한 청소년에게 외모를 바꾸라는 압박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옌스 슈판 장관의 새 법안은 기존 광고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를 포함해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성형수술 광고는 물론 성형수술에 관한 어떤 홍보자료도 금지한다. 지금까지는 14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형수술 광고에 대해서만 금지해왔으나 새 법안은 나이 제한 없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형수술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법안에 대해 전문의들은 찬성하면서도 성형수술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독일 성형외과의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독일에서 77,485건의 성형수술이 시행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전년

3) 작성: 채혜원 독일통신원

보다 9% 증가한 수치다. 사회민주당의 보건 관련 전문가 칼 라우터바흐 의원은 ‘타게스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소년의 성형 수술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에서 16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이 성형수술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심리 상담에 참여해야 하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며, 상담 후 수술까지 4주의 대기 기간이 유지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 • 참고문헌 •

Der Tagesspiegel(2019.10.16.). “Spahn plant Werbeverbot für Schönheits-OPs bei Jugendlichen”, <https://www.tagesspiegel.de/politik/du-bist-ok-genauso-wie-du-bist-spahn-plant-werbeverbot-fuer-schoenheits-ops-bei-jugendlichen/25119428.html> (검색일 : 2019.10.24.).

DW(2018.10.02.). “New German government plans to clamp down on advertising with skinny women”, <https://www.dw.com/en/new-german-government-plans-to-clamp-down-on-advertising-with-skinny-women/a-42533728> (검색일 : 2019.10.24.).

## 독일, 항공 승무원 대상 성희롱 문제 심각

최근 독일에서 항공 승무원이 겪는 성희롱 문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항공승무원비영리조직(UFO: Unabhängigen Flugbegleiter Organisation)에 따르면, 항공승무원 2명 중 1명꼴로 직장에서 적어도 한 번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지난 5월 ‘UFO’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졌으며, 1,000명 이상의 항공 승무원이 참여했다. 항공 승무원에 대한 성희롱은 주로 기내에서 발생했으며, 성차별적인 발언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생했다. 가해자의 45%는 파일럿과 같이 높은 직위에 있는 직원, 25%는 승객이거나 같은 등급의 승무원이었다. 이에 대해 UFO 조직의 실비아는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승무원을 대상으로도 교육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이와 관련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는 항공사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UFO는 성희롱과 함께 성차별적 업계 문화에 대해 비판하면서, 여성승무원에 대해 메이크업과 하이힐 착용 등을 요구하는 사안도 문제라 지적했다. UFO는 회원 항공사의 임금 정책과 임금 체결, 여러 법적 지원을 제공하며 국가 및 국제 차원의 로비 활동을 통해 단체 이익을 보호한다. 이와 함께 승무원의 재교육을 통해 직무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참고문헌 •

- UFO(Unabhängigen Flugbegleiter Organisation) <https://ufo-online.aero/de> (검색일: 2019.9.22.)
- Die Welt(2019.8.13.), "Viele Flugbegleiter sind sexueller Belästigung ausgesetzt," <https://www.welt.de/vermischtes/article198422453/Umfrage-Flugbegleiter-oft-sexueller-Belaestigung-ausgesetzt.html> (검색일: 2019.9.22.)
- Der Spiegel(2019.8.16.), "Lange Haare, Dutt und Hütchen – das wird als Firmenidentität verkauft," <https://www.spiegel.de/karriere/sexuelle-belaestigung-von-flugbegleitern-warum-das-problem-so-gross-ist-a-1282061.html> (검색일: 2019.9.22.)

## 독일, '아버지 지원'과 '유연근무제 확대'로 가족친화기업 증가

독일 쾰른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가족친화기업 보고서 2019'에 따르면 독일 기업에서 가족친화정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가족친화정책을 중시하는 기업 관리자와 인사담당자 비율은 83%에 이르며, 아버지를 위한 지원 조치를 새로 제공하거나 강화된 기업 비율은 전체 기업 중 절반 이상인 53%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업 규모는 직원 수가 5명~50명 미만인 소규모 기업이다. 보고서의 5가지 정책영역(유연한 근무 시간 및 업무 조직/육아휴직 및 육아 지원/아이 돌봄/가까운 가족으로부터 가정 돌봄 제공/ 가족 서비스/정보 및 상담 제안) 중 2015년보다 크게 나아진 영역은 '아버지 지원'과 '유연근무제'이다. 아버지 지원정책을 제공하는 기업 비율은 2015년 35%에서 2018년 53%로 크게 늘었다. '유연근무제'는 전체 기업의 92%가 '시간제 근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79%는 정해진 기간에 한해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10개 기업 중 8곳에서 개별적으로 합의된 근무시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10개 기업 중 7곳에서 주4일 근무 모델-하루 8시간을 주4일에 나눠 근무한 후 나머지 하루를 쉬는 형태-을 하고 있다. 프란치스카 기파이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90%에 이르는 직원이 가족친화정책이 기업문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용 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생산성을 낮추는 일이므로 직원 가족과 관련된 지원정책이 주요 인사정책이 되도록 상황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 참고문헌 •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19.09.16.), "Unternehmensmonitor Familienfreundlichkeit 2019", [www.bmfsfj.de/unternehmensmonitor](http://www.bmfsfj.de/unternehmensmonitor)

(검색일: 2019.10.12.)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19.09.17.), “Familienfreundlichkeit stärkt Arbeitgeberattraktivität”,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lungen/familienfreundlichkeit-staerkt-arbeitgeberattraktivitaet/138476> (검색일: 2019.10.12.)

## 덴마크<sup>4)</sup>, 성 불평등한 휴직활용 개선을 위한 성평등한 육아휴직 개편방안 논의

올해 6월, EU는 일·가정양립에 대한 새로운 지침(directive)을 발표했다. 본 지침은 2022년부터 발효되며, 부모 각 측은 최소 4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 이전 시행령 내용은 유지하되, 서로 양도할 수 없는 육아휴직 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렸다. 늘린 목적은 총 8개월의 부모 합산 육아휴직 중 절반 이상은 남성이 쓰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덴마크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에서 육아휴직은 대체로 남성은 약 31일을 쓰고, 나머지 298일은 여성이 쓴다고 한다. 덴마크 일각에서는 일하는 여성, 특히 여성 사업가들에게는 오히려 EU의 새로운 육아휴직 지침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덴마크 내 모든 여성단체들을 아우르는 여성단체연합인 Kvinderådet(The Women's Council in Denmark)와 18,000여개의 중소기업 연합인 SMVdanmark는 이번 EU 새 지침은 오히려 성별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부모가 원하면 똑같이 육아휴직 기간을 나누든, 한쪽에 몰아주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지침이 발효되기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다. 제도적인 충돌을 방지하면서 보다 성평등한 육아휴직 사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 참고문헌 •

Copenhagen Post (2019.09.26.), “Criticism of earmarked maternity: May hit young female entrepreneurs: Forced leave could further worsen already dire situation”, <http://cphpost.dk/news/criticism-of-earmarked-maternity-may-hit-young-female-entrepreneurs.html> (검색일: 2019.10.08.)

Copenhagen Post (2019.09.05.), “Denmark wants more gender equality in parental law: Government looking to get more fathers to take paternity leave”, <http://cphpost.dk/news/denmark-wants-more-gender-equality-in-parental-law.html> (검색일: 2019.10.08.)

4) 작성: 광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스웨덴<sup>5)</sup>, 18세 미만 미성년의 결혼을 금지한 아동 결혼 금지법 개정안 발효

스웨덴은 2019년 1월부터 “아동결혼금지법 개정안”을 발효하여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모든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스웨덴에서의 아동 결혼금지법은 1973년부터는 남녀 모두 만 17세로 조정되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15세 이전 이미 다른 국가에서 결혼 후 스웨덴에 입국한 경우는 예외를 적용했다. 수차례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 결혼이 매년 증가하자 2014년 7월 스웨덴인들은 외국인 파트너를 만나더라도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결혼을 허용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경우 출신국에서 허용하는 결혼 연령(만 15세)에 따라 결혼을 해서 스웨덴으로 이주할 경우 법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고, 미성년자와 결혼을 한 후 파트너가 만 18세를 넘기면 스웨덴으로 입국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보다 엄격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 이어졌다. 이러한 논의는 2017년 아동결혼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후 더욱 격렬해졌다. 편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 현행법은 즉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측과 현행법은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측으로 나뉘었다. 전자는 아동결혼금지법의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이민자 출신국에서의 아동 결혼 무효를 주장했다. 반면, 후자는 아동 결혼 문제는 단순히 스웨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8년 스웨덴 보건 복지위원회에서 발간한 “어린이와 결혼한 사람을 위한 정보(Information till dig som ar gift med ett barn)” 브로셔가 발표되었다가 철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브로셔 사건 이후 다시 한 번 아동결혼금지법에 대한 개정안이 논의되었고,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모든 결혼을 금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출신국법에 따라 미성년자와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스웨덴에서는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거주 승인이 불가능해졌다.

### • 참고문헌 •

- THE LOCAL(2017.12.06.), “Sweden to crack down on child marriages”, <https://www.thelocal.se/20171206/sweden-to-crack-down-on-child-marriages> (검색일: 2019.11.02.).
- THE LOCAL(2017.03.29.), “Swedish agency backtracks following child marriage brochure storm”, <https://www.thelocal.se/20180329/swedish-agency-backtracks-following-child-marriage-brochure-storm> (검색일: 2019.11.10.).
- THE LOCAL(2018.11.21.), “Sweden to stop recognition of child marriages carried out overseas”, <https://www.thelocal.se/20181121/sweden-to-stop-recognition-of-child-marriage>

5) 작성: 홍희정 울산라대학교 젠더연구센터 객원연구원

## 캐나다<sup>6)</sup> 온타리오주, 범죄피해자·피의자 성별 비공개 전환으로 젠더폭력 현황파악에 어려움 예상

지난 9월 23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경찰은 진보적인 시대 변화에 맞추어 성별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성별 정보는 경찰 내부 분석용으로만 수집될 것이며, 예외적인 경우, 예컨대 용의자나 실종자를 경찰이 수색 중인 경우에 한해 성별정보를 공개할 것이라 했다. 경찰은 경찰 행정의 목적은 위법행위를 한 개인이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성별은 중요하지 않은 정보라 설명하면서, 내년 5월부터 일선 경찰들의 교육 과정에 반영할 것이라 발표했다. 경찰발표 직후 전문가들은 성별 정체성에 대한 존중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공공의 알권리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와 학계, 특히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범죄 관련한 시민단체들로 부터의 비판이 거센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향이 캐나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젠더적 측면을 감추는 역할을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예컨대 캐나다 페미사이드 감시단은 경찰의 조치가 앞으로 캐나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의 실상을 알기 어렵게 할 것이라 비판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인다. 온타리오주에서 성범죄자의 경우 유죄가 확정되는 즉시 등록되며 범죄자의 이름과 신상정보, 성범죄자가 7일 이상 머문 곳의 주소, 소유 차량에 대한 상세 정보, 범죄 수법, 범인의 고용주와 종사 분야가 기록된다. 또한 온타리오는 모든 성범죄자의 DNA를 수집하고 있으며, 죄질에 따라 최소 10년부터 평생에 이르기까지 범죄자를 성범죄자 명단에 포함시키고 실행 수감기간이 끝난 뒤에도 경찰의 감시를 적용하고 있다.

### • 참고문헌 •

The Globe and Mail (2019.09.24.), "Researchers, advocates argue OPP gender rule change will blur understanding of crimes against women",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researchers-advocates-argue-opp-gender-rule-change-will-blur/> (검색일: 2019.10.08.)

## 캐나다, 온라인 증오범죄 대응 관련법(Bill C-13)의 실효성 강화 요구 확산

사이버 여성혐오(Cyber misogyny)는 캐나다 West Coast LEAF(Legal Action &

6) 작성: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Education Fund)가 처음 고안해낸 용어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온라인상에서 폭력의 대상이 되고 그 폭력의 양상이 다른 폭력과는 상이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 등이 포함된다. 사이버 폭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킨 2012년 아만다 토드(Amanda Todd) 사건의 경우 15세 여학생이 랜덤 채팅으로 만난 남성들과 또래 남학생들로 부터 사이버 스토킹, 이미지 배포, 협박 등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에 이르렀는데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아만다 토드 사건 직후 캐나다 정부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규율 논의를 시작해 2015년 3월 온라인 범죄로부터의 보호법(Bill C-13, the Protecting Canadians from Online Crime Act)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경찰이 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근거가 있다면”만으로 요건을 간소화 했고 사적인 이미지를 당사자 동의 없이 배포하는 것 금지를 명문화하였으며, 법원으로 하여금 사적인 이미지 삭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Bill C-13은 계속되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이 법안이 정부의 민간인 사찰에 이용된다는 비판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이 법안 자체가 사이버 여성혐오 범죄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올해 캐나다 정부는 온라인상의 증오 발언, 허위 사실 유포 등을 규제하기 위한 디지털 현장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이 여성혐오 측면을 얼마나 다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 • 참고문헌 •

- Canadian Women's Foundation(2019.07.), "The Facts about Online Hate and Cyber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in Canada", <https://www.canadianwomen.org/the-facts/online-hate-and-cyberviolence/> (검색일 : 2019.11.09.).
- CBC(2016.11.02.), How Montreal police were able to use legal means to track a journalist, <https://www.cbc.ca/news/canada/montreal/montreal-police-spy-patrick-lagace-journalist-1.3831584> (검색일 : 2019.11.09.)
- Battered Women's Support Services(2014.5.), "Cyber-violence against women", <https://www.bwss.org/wp-content/uploads/2014/05/CyberVAWReportJessicaWest.pdf> (검색일 : 2019.11.09.).

## 캐나다, 자궁경부암 백신의 남성 접종 등 자궁경부암 예방 프로그램 확대

최근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과 브리티시 컬럼비아 여성병원(B.C. Women's Hospital) 공동연구팀이 국제적인 전염병 학술지(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에 게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주정부의 자궁경부암

백신(정확히는 HPV 인유두종 백신 Gardasil)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자궁경부암의 전 단계인 자궁경부 세포 변형 발병률이 57% 낮게 나타났다. 이로써 초등학교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자궁경부암 백신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유도해온 주정부의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첫 그룹인 당시 6학년 여학생들이 현재 자궁경부암 스크리닝 프로그램에 대상자가 되어 연구자들로 하여금 백신 프로그램의 장기 추적 연구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캐나다는 2007년부터 자궁경부암 백신을 공공의료 서비스에 통합시켜 무상으로 접종하고 있다. 2007년 제도 도입 당시 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왜 성관계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느냐, 초등학생에게 자궁경부암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어린 나이의 학생들에게 성적 방종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또한 거뻐다. 이에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를 포함한 주정부들은 학교에서 접종을 하되 의무는 아닌 자발적 접종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후 캐나다 전역에서 HPV 바이러스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흔히 나타나며 성관계로 쉽게 전염되는 만큼 남자 어린이들에 대한 접종까지도 공공의료에 포함 시켜야만 백신의 진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커졌다. 이러한 압력은 2012년 발간된 국가 예방접종 자문 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NACI)의 공식 자문결과로 더 힘을 얻게 되었다. 최근 점차 캐나다의 많은 주들이 남성 또한 자궁경부암 백신 프로그램에 포함 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 • 참고문헌 •

- BC Centre for Disease Control(2018), Immunization Uptake in Grade 6 Students, [http://www.bccdc.ca/resource\\_gallery/Documents/Statistics%20and%20Research/Statistics%20and%20Reports/Immunization/Coverage/Grade%206%20Coverage%20Results.pdf](http://www.bccdc.ca/resource_gallery/Documents/Statistics%20and%20Research/Statistics%20and%20Reports/Immunization/Coverage/Grade%206%20Coverage%20Results.pdf) (검색일 : 2019.10.17. ).
- The Star(2019.10.16), HPV immunization program in B.C. cuts rates of pre-cancer in women, study says, <https://www.thestar.com/vancouver/2019/10/16/hpv-immunization-program-in-bc-cuts-rates-of-pre-cancer-in-women-study-says.html> (검색일 : 2019. 10. 17.).

## 북아일랜드<sup>7)</sup>, 낙태 합법화로 2020년 4월부터 낙태 시술 서비스 제공

엄격한 낙태 금지법을 고수해온 북아일랜드에서도 낙태가 허용된다. 북아일랜드에서 낙태가 합법화된 것은 올해 7월 영국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 덕분이다. 지금껏 북아일랜드

7) 작성: 황수영 브리스톨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는 제한적 낙태만 가능했었다. 이에 비해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은 의사 두 명의 승인 아래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합법적으로 이뤄지며, 임신 24주가 넘더라도 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영국과 웨일스에서 이뤄진 낙태 총 205,295건 중 4,587건이 영국으로 '낙태 원정'을 오는 여성들에 의해 이뤄지는 낙태로 나타났다. 10월 22낙태 금지법이 폐지된 다음날,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법원은 2013년 15세 딸의 낙태약을 온라인으로 샀다가 기소된 여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라고 배심원들에게 주문했다. 해당 여성은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할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 사건은 북아일랜드도 영국 다른 지역처럼 낙태를 허용하자는 지속적인 캠페인이 시작된 계기가 됐고, 올해 7월 영국 의회가 관련법을 통과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내년 4월부터 낙태시술 서비스는 북아일랜드 2개 병원에서 제공되며, 8년 이상 경력 있거나 낙태관련 전문훈련을 받은 의사만 시술할 수 있다. 북아일랜드 정부는 낙태 의료 서비스가 시행되면 매년 1,060건의 낙태 시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 참고문헌 •

- BBC(2019.10.22.). "Northern Ireland abortion law changes: What do they mean?", <https://www.bbc.com/news/uk-northern-ireland-50125124> (검색일 : 2019.10.22.).
- BBC(2019.10.22.). "Northern Ireland abortion and same-sex marriage laws change", <https://www.bbc.com/news/uk-northern-ireland-50128860> (검색일 : 2019.10.22.).
- The Guardian(2019.10.23.). "Woman in Northern Ireland abortion pills case formally acquitted",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19/oct/23/woman-northern-ireland-abortion-pills-case-formally-acquitted-legal-reforms> (검색일 : 2019.10.22.).

### 스페인<sup>8)</sup>, 법원의 미성년자 집단성폭행을 성학대로 판결해 논란 확산

2019년 11월 초, 스페인 바르셀로나 고등법원은 바르셀로나 북부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파티 이후, 14세 소녀를 버려진 공장 건물로 끌고 가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 5명에게 각 10~12년형을 선고했다. 판결이 내려진 바로 다음 날, 법원 판결에 반대하며 법 개정을 주장하는 시위가 개최됐다. 스페인 현행법 상 성폭행은 약 15~20년의 중형을 받는 것에 비해 이번 판결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었고, 성폭행 당시 가해자들이 그 어떤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판결 근거로 삼아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8) 작성 :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일었다. 현재 스페인에서는 형법상 피해자가 성범죄 또는 그 위협을 당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물리적 위협이나 폭력이 동반되지 않는 한 성폭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아다 콜라우(Ada Colau) 바르셀로나 시장은 본인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번 판결은 말도 안 되는 결과라면서, 가부장적(patriarchal) 사법 제도의 결과물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스페인 내 여성 인권 활동가 및 사법 분야 전문가들 역시 관련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스페인 여성단체인 Women's Foundation 대표인 마리사 솔레토(Marisa Soletto) 역시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번 사건은 스페인법이 개정되어야 함을 여실히 드러낸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검찰은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이다. 가해자들의 혐의가 성폭행으로 변경되고, 그에 따라 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더불어 정부가 성폭행에 대한 법 개정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 참고문헌 •

- Euronews(2019.11.02.), "Spain's rape laws in the spotlight after men cleared of gang-raping teenager", <https://www.euronews.com/2019/11/02/spain-s-rape-laws-in-the-spotlight-after-men-cleared-of-gang-raping-teenager> (검색일 : 2019.11.08.)
- Euronews(2019.11.06.), "Spanish prosecutor to seek tougher rape verdict in abuse case after protests", <https://www.euronews.com/2019/11/06/spanish-prosecutor-to-see-tougher-rape-verdict-in-abuse-case-after-protests> (검색일 : 2019.11.08.)

## EU 5개국, 여성 10명 중 6명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경험<sup>9)</sup>

유럽 내 싱크탱크 기관인 Jean-Jaurès Foundation과 the European Foundation for Progressive Studies에서는 미투(Me too) 운동 2년을 기념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프랑스 여론조사기관 IFOP (Institut français d'opinion publique)에서 올해 4월 온라인으로 실시했으며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5개국 총 5,026명의 18세 이상의 여성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5개 유럽 국가 약 60%의 여성이 직장에서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국 모두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성차별 또는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독일이 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페인 66%, 영국 57%, 이탈리아 56%, 프랑스 55%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세 이하의 여성 66%가 최소 1회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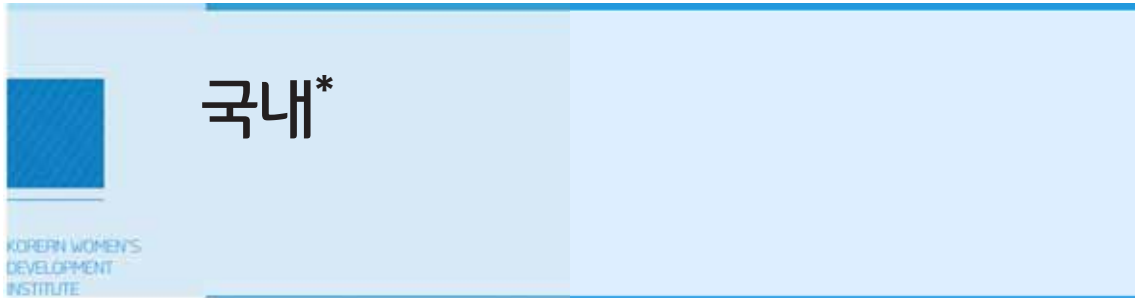
9) 작성 : 광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피해 경험이 있으며, 30세 이하 여성 15%는 이미 직장에서 누군가와 강요로 인한 또는 원치 않은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고 했다. 모든 유형에서 50% 이상의 응답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했다. 뚫어지게 쳐다보거나 신체 평가와 같은 성희롱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9%만이, 영타가 접촉, 강제 포옹 또는 입맞춤에 대해서는 13%만이, 취직이나 승진을 대가로 한 성관계 요구에 대해서는 약 16%만의 여성응답자가 상사에게 이를 말했다고 했다. 이러한 실질적인 데이터가 앞으로 해당 국가의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볼만하다.

#### • 참고문헌 •

- Jean-Jaurès Foundation & the European Foundation for Progressive Studies(2019), “European Observatory on sexism and sexual harassment at work”. [https://www.feps-europe.eu/attachments/publications/116268\\_rapport\\_feps-fjj\\_uk.pdf](https://www.feps-europe.eu/attachments/publications/116268_rapport_feps-fjj_uk.pdf) (검색일 : 2019.10.22.).
- The Brussels Times(2019.10.12.), “60% European women victims of workplace sexism”. <https://www.brusselstimes.com/all-news/belgium-all-news/72959/60-european-women-victims-of-workplace-sexism/> (검색일 : 2019.10.22.)



## [여성가족부]

### 9월 1일,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 지정

- 여성가족부는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여권통문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 여성권리 선언으로 한국 여성운동의 시작점이 된 여권통문이 선언된 날을 기념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10.31.]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609](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609)

### 성평등 정책 협업 강화를 위한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

-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교육부 등 8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가 신설되고 7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채용된 이래 처음으로 과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부처별 양성평등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및 여성폭력방지대책 기본계획(안) 등을 공유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지원 전문가 TF 구성[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11.24.]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674](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674)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내동향」 중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주요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임.

## 공무원의 적극행정 지원 위한 위원회 27일 출범

- 여성가족부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가족부 적극행정 지원 위원회’ 발족[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9.26.]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547](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547)

## 모든 공무원에 대한 효과적인 성인지 교육 실행방안 모색

- 여성가족부는 ‘공무원 성인지 교육 효과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성인지 교육 전문가, 중앙지자체 교육운영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함. 공무원 성인지 교육의 대상이 ‘성주류화 제도 관련 업무 담당자’에서 ‘국가 및 지자체 소속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장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 체계와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11.13.]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636](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636)

## 남녀 모두를 일과 돌봄의 주체로 설정한 정책으로 전환 필요

-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성평등 관점에서의 자녀 돌봄, 여성 고용, 일생활 균형 등 각 영역에서 추진해야 하는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11.18.]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649](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649)

##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지속 증가, 올해 목표치 조기 달성 전망

-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따르면, 양성평등위원회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2018-2022)」에 따른 2019년도 상반기 이행점검 서면심의 결과, 총 12개 중 6개 부문에서 2019년도 목표를 조기 달성했고, 나머지 6개 부문도 이미 90% 이상 달성해 올해 안에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목표달성률) : 국가직 본부장급(106%)·지방직 과장급 공무원(105%), 공공기관 임원(108.2%), 지방공기업 관리자(107.4%), 교장·교감(100.5%), 정부위원회(106.5%)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10.07.]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558](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558)

**2019년 1분기 기준 여성 임원 4.0%, 여성 사외이사 3.1%**

- 여성가족부가 기업 내 유리천장 해소를 위한 임원의 성별 불균형 정도를 파악하고자 2019년 1분기 기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 전체(2,072개)의 성별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여성 임원 비율 4.0%, 여성 사외이사 비율 3.1%로 기업의 의사결정 영역에서의 여성 선임 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10.16.]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583](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583)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정책 강화**

-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이번 법률 개정은 앞으로 제3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2020~2024년)에 경력단절예방에 관한 시책을 포함하고 이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재직여성의 고용유지, 기업 직장문화개선 등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통해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10.31.]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608](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608)

**성인지예산제도 개선 위해 재정분야 전문가 머리 맞댄다**

-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성인지예산제도 개선을 위한 포럼을 개최함. 이번 포럼은 주요 재정사업의 성평등 효과분석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재정학회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국가 재정과 성평등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관리 강화 등 개선방안에 대해 재정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9.18.]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531](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531)

### ‘혼인 외 출생자’ 민법용어 폐기 찬성 75.6% 가족 다양성 수용도 높게 나타나

- 여성가족부는 지난 8월 중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 조사 결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부모·다문화·비혼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을 위한 법과 제도 등 지원정책의 필요성에도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9.27]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549](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549)

### 자녀 면접교섭 지원서비스 활성화로 양육비 이행률 높인다

- 여성가족부는 11월 22일(금) ‘제1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통해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의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2019년도 사업 성과와 더불어 2020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2019.6.25. 시행)하여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가 가능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면접교섭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11.21.]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665](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665)

### 질병감염아동 돌봄지원서비스 올해 약 3만여 건 이용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증가

- 여성가족부는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 건수가 28,994건으로 전년 동기(같은 기간) 14,209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힘.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설 이용 아동이 수족구병 등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되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등에 갈 수 없게 된 경우 보호자가 긴급하게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임.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10.01]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553](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553)

### 성평등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양보호사 근로환경 개선 필요

- 여성가족부는 2018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 노인장기요양인력 제도, ▲ 민간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 사회적 경제 지원정책, ▲ 사회보장정책, ▲ 게임문화산업, ▲ 남북관계분야 총 6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에 개선 권고
- 노인장기요양인력제도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수급자와 가족 대상으로 인권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성별균형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관계부처에 권고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11.20.]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653](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653)

### 성희롱·성폭력 사건 초기상담- 신고- 사건처리 돕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만든다

-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문화예술계 자유계약자 포함)에게 분야별(공공, 교육, 민간, 문화예술) 지원내용, 사건처리 절차 등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 (가칭)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개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9.26.]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546](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546)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10.31.]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610](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610)

### 입국부터 초기정착까지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19년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후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 발표

- 앞으로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거주지역 해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되고, 가장 어려움이 많은 입국초기에 한국생활 정보습득, 결혼생활 관련 고충상담 등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11.22.]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666](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666)

### 결혼중개업 양도 시 행정처분 받은 사실 알려야

-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자가 사업장 양도 시 행정처분 사실 등을 명확히 알리게 하고, 신고필증 등 분실에 따른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0월 18일(금)부터 시행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10.17.]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587](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587)

## [보건복지부]

### 2020년부터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 맞춤형 제공

- 보건복지부는 2020년 1월부터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하여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징은 ① 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다양화, ② 참여형 서비스 신설, ③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④ 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 도입, ⑤ 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 ⑥ 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사업 확대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10.10.]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51121](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51121)

### 치매 예방을 위해 남녀별 다른 관리가 필요

- 질병관리본부는 치매 임상연구 용역을 통해 남녀별로 인지기능 저하에 영향을 주는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상이함을 확인하고, 치매 예방을 위해 남녀별 차별화된 예방전략이 필요함을 발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09.20]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50936](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50936)

### 사실상 혼인관계 부부도 난임치료시술 가능

- 보건복지부는 그간 혼인신고 된 법률혼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모자보건법을 개정, 10월 24일(목)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10.07.]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51091](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51091)

###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9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7세 미만(현재 만6세 미만)까지로 확대 지급하며, △500세대 이상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도록 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09.24]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50969](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50969)

### 세계 장애인 여성의 건강 핸드북 번역·발간

-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여성의 임신·출산 등의 건강에 관한 한글 번역도서인 「세계 장애인 여성의 건강 핸드북(편람)」을 발간함.
  - \* 「세계 장애인 여성의 건강 핸드북」은 42개국 장애인 여성들의 성장, 임신, 출산, 양육, 노화, 정신건강 등 생애 전반에 걸쳐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와 사례가 수록되어 있으며, 정보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방법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여성이 '건강한 삶'을 가꾸는 데에 필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10.29.]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51341](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51341)

## [고용노동부]

###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 고용노동부는 10월 1일(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함.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09.30.]

• 참고문헌 •

[http://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10353](http://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10353)

### 지난 13년간 민간기업·공공기관의 여성 근로자 비율(7.64%p) 및 관리자 비율(10.91%p) 지속 증가

-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는 '19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분석 결과를 발표함.
  - 분석 결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총 2,064개사(공공 332개사, 지방공사·공단 43개사, 민간 1,689개사)의 2019년 여성 근로자 비율은 38.41%, 관리자 비율은 21.13%로 제도가 시행된 2006년에 비해 각각 7.64%p, 10.91%p 증가
  - 다만, 올해부터 새롭게 대상 사업장으로 추가되어 여성 고용 현황을 제출한 사업장은 기존의 대상 사업장 보다 여성 근로자 비율 등이 현저히 낮아 향후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남.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10.30.]

• 참고문헌 •

[http://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10434](http://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10434)

### “함께하는 여성 일자리, 내 일(work)을 연다!”

- 고용노동부는 남녀 고용 평등 우수 기업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 수행한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여성 일자리 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발표[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11.21.]

• 참고문헌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11](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11)

##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위, 여성이라는 이유로 입사 시 등급 차별·승진배제 말아야!

-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등급으로 채용하여 단순·반복 업무에만 배치하고, 승진에 필요한 직무와 직위는 남성에게만 부여하는 등 여성을 승진과 임금에서 차별한 피진정회사에 대하여 오랜 기간 누적된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9.09.20]

• 참고문헌 •

<http://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4525>

### 초중고 학생선수 63,211명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발표

-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본원에 의뢰해 실시한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 실태 전수조사 결과와 스포츠 (성)폭력 판례 분석 결과’ 발표
  - 조사 결과, 학생선수들의 신체폭력 경험은 일반학생의 1.7배, 성관계 요구·강간 피해는 24건으로 집계되었으며, 학생선수들이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공적 피해 구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음을 확인[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9.11.06.]

• 참고문헌 •

<http://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menuid=001004002001&boardid=7604726>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5·6차 정 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국내에 알리고 최종견해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성명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9.10.17.]

• 참고문헌 •

<http://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1&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4662>

## [통계청]

### 2019년 사회조사 결과(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 통계청이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부문에 대하여 전국 약 1만 9천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여건, 사회보장제도 등이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우세
-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로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고용(취업)지원서비스’를, 60세 이상에서는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를 꼽음 [통계청 보도자료, 2019.11.25]

#### • 참고문헌 •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78876&pageNo=2&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78876&pageNo=2&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 2019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부가항목) 경력단절여성 현황

- 통계청이 2019년 상반기(4월)에 실시한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경력단절여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일)을 그만둔 사유는 육아(38.2%), 결혼(30.7%), 임신·출산(22.6%), 가족돌봄(4.4%), 자녀교육(4.1%) 순으로 나타남 [통계청 보도자료, 2019.11.26.]

#### • 참고문헌 •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78878&pageNo=2&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78878&pageNo=2&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 2018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 통계청은 우리나라 국민이 「통계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출생·사망·혼인·이혼 자료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자료를 활용한 ‘2018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발표 [통계청 보도자료, 2019.11.06.]

#### • 참고문헌 •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78479&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78479&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